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톨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 |
|--------|--|
| • 문서번호 | 지역언론톨아보기2021-015 |
| •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 •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 • 제 목 | [지역언론톨아보기] 해상 케이블카 재추진, 지역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
| • 날 짜 | 2021년 5월 17일 |

공공성 부족으로 반려된 해상케이블카, 부산의 미해결 ‘장기표류 사업’으로 강조한 국제신문

논란 많았던 해상케이블카 사업,
다시 지역 이슈로 재점화

부산의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지역의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 교통난과 주차문제, 환경훼손의 문제 그리고 공적 기여가 미미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반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상케이블카 추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5월 11일, 부산시에 사업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았고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부산블루코스트가 제시한 사업의 수정지점에 주목했지만 전달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해상케이블카 추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하는 반면,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재추진의 논란지점을 짚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 미해결 ‘장기표류 사업’으로 강조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업 수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5월 12일 1면의 <‘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기사와 3면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했는데,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부산의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블루코스트가 파격적인 수정안을 내놨다

며 상세히 전했습니다.

‘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부산블루코스트, 시에 제출
해운대-이기대공원 4.2km
6091억 사업- 부산銀 투자
1차 제안 반려돼 파격 수정
“부산대표 자산으로 만들 것”

장 해상케이블카다. 사업비는 6091억 원으로, 1차 제안 때보다 1591억 원이 늘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주차난과 환경훼손, 공적기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차 제안서가 반려된 점을 의식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교통 분야에서는 해운대와 이기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1097대에서 1972대로 배 가까이 늘렸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타워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한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3S 케이블카(캐빈을 지탱하는 케이블이 3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공적기여 방안도 대폭 확대했다.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한 국제신문 기사, 5월 12일자, 1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1097대에서 1972대로 배 가까이 늘리고,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바다 위에 세워지는 해상타워를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그리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겠다”는 수정 내용을 전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산의 관광업계와 정치권의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자 8면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투자규모는 미지수>에서 BNK부산은행과 같은 지역의 주요 기업, 그리고 부산관광공사나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의 투자 가능성과 시민 공모주 발행과 같은 다양한 자본 참여의 가능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제신문은 부산블루코스트가 사업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해상케이블카 문제를 이슈화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자 국제신문 1면 <장기 표류사업 100여 개...부산발전도 공회전>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으로 (주)도시와공간연구소에 의뢰해 부산시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 100여 개 중 주요 사업 12개에 대한 시민 1000명의 의견을 묻은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저출산 극복,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 더파크 동물원 정상화,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용, 청년주택 및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 등 12개 사업에는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포함시켰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 해상케이블카는 12개 사업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업의 필요 찬반’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3.5%로 필요없다(27.8%)는 의견을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성·친환경 제대로 보완 땐 새 관광명소 기대

■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해운대구민 贊 49.2%, 反 26.3% 사업자 이달 중 2차 제안서 제출 환경훼손·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주민 반대의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수년 간 제자리걸음만 해오던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부산블루코스트의 2차 사업제안서 제출(5월 중순 계획)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2006년 부산시가 해상관광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했다. 2009년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했고,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은 2014년 케이블카 설치타당성 검토에 나서 8개 노선 가운데 이기대(용호부두)-해운대(동백섬) 노선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블루코스트는 2년 뒤인 2018년 5월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운영하겠다고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노선도

시에 사업을 제안했다. 해운대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까지 4.2km 구간을 잇는 코스다. 총사업비 5359억 원으로 들어 35인승 케이블카 19대를 갈아타고에서 바다쪽으로 해 연간 300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는 6개월 만에 제안을 반려했다. 해운대 일원 교통대행 미흡,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이유였다. 소강 상태에 빠졌던 이 사업은 부산블루코스트가 2019년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반대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국제신문이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관해 1000명의 부산시민에게 묻은 결과 예상치를 뛰어넘어 해운대구 주민의 49.2%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반대 26.3%)는 일상을 밝혔다. 사업자도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상타워를 3개만 설치하며 케이블카 양쪽 정류장은 블루코스트 소유의 타워 건물(용호동)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동백유원지로 정했다. 동백섬에 들어설 육상 보조타워도 수목이 우거진 곳이 아닌 큰 크리트 선착장에 건설할 계획이다.

마린시티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는 자동정문호류장치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민간기업이 사업을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산관광공사를 비롯한 지역 금융 및 기업의 지원참여 길을 열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1차 제안 때 지자체 상을 보완해 이달 중순 2차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제안 때보다 총사업비는 733억 원이 늘었고 탑승객 목표는 65만 명을 늘려 잡았다. 사업자 측은 "30년간 1조301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546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105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며 "사회공헌과 사회적 약자 우선 고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뢰 조항도 다룬이던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찾기가 어렵다. 주민반대,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장기표류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이 재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박형준 시장에게 보고해 여론 시인 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경과

| 연도 | 주요 내용 |
|-----------|--|
| 2006년 7월 | 부산시 해상관광개발 계획 수립 |
| 2007년 7월 | 동일시도 부산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용역보고서 제출 |
| 2009년 11월 |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
| 2014년 |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
| 2018년 5월 | 부산블루코스트 부산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제안 |
| 2019년 11월 | 시, 케이블카 사업 추진단 발족 |
| 2019년 8월 | 시, 시민참여형 제안 시스템(CK) 1차 개최 |
| 2019년 8월 | 부산블루코스트 사업제안서 제출 |
| 2019년 8월 | 부산블루코스트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위원회 제1차 회의 |
| 2020년 | 남부 지역과 사업권 중심으로 해상관광 케이블카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
| 2022년 5월 | 부산블루코스트 부산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제안서 제출 |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한 국제신문 기사, 5월 3일자, 6면>

시민 의견조사 결과 보도에 이어, 5월 3일자 6면 [부산장기표류사업] 특별면에 해상케이블카 문제를 두 번째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하며 시민의견 순위보다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공공성. 친환경 제대로 보완 땐 새 관광명소 기대>에서 부산블루코스트가 아직 사업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이었지만,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해상케이블카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 '반대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근거로 "해운대구 주민의 49.2%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반대 26.3%)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특정 지역의 찬반 결과를 강조해 해상케이블카 문제가 마치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부산의 숙원사업인 듯한 인상을 준 겁니다.

해당 사업자 입장만 부각한 KNN



<KNN 해상케이블카 보도 화면, 5월 11일, 뉴스아이>

KNN도 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의 입장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내용 대부분은 교통대책·공공기여방안·환경대책 등 사업 수정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 했고, 보도 1분 52초 중 1분 28초는 부산블루코스트가 제공한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영상으로 채워져 마치 부산블루코스트 홍보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뉴스 마지막에 환경·시민 단체의 반발로 찬반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구체적인 반대 목소리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려점 전한 부산일보와 부산MBC

부산일보도 매출액 3% 기부, 자동창문호림장치 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 외에도 승강장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복지의 날 운영, 직원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배려 등 제안서에 담긴 다양한 보완책을 소개했습니다만, 반대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5월 12일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이번에는?>에서 부산녹색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광안리 해안과 광안대교, 동백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부산의 자랑거리이자 랜드마크”라며 “이곳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MBC는 사업 제안에 따른 논란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5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논란..재점화되나>라는 리포팅을 통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하며 “해안경관이라는 공공재가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주자대수 확대에 대해서도 교통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입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공통적으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인터뷰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재를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안 경관은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의 한 부분으로, 케이블카가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KBS부산은 12일 단신으로 전함으로써 중요한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논란 많은 공공재 기반 개발 사업일수록 지역언론의 공론장 역할 강화해야

시민에게 주어진 공적 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공공재 훼손의 우려로 반려된 사업이라면 추진 사업자의 입장을 검

증없이 전달하기 보다는, 수정 제출된 사업안의 문제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특정지역의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부산의 바다를 향유할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